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충청남도규칙 제3405호, 2019.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사회적경제과), 041-635-39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제2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4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30.>
 ② 제1항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과장, 팀장, 사무국장 등)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과장과 협의회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 민간 협의회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5. 4. 30., 2019. 12. 30.>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자체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 상법상 회사 등 조합원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조직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6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상법상 회사 등 조합원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 한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도지사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검토, 현지 확인 등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심사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①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지정받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5. 기타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도지사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최대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4장 마을기업

제10조(마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다목에 의한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마을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마을기업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마을기업의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협동조합

제12조(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라목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활성화 비전과 전략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발굴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 현장의 수요 파악
 2. 지역 현장의 수요를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신고·인가 지원
 4. 협동조합 현장 교육, 컨설팅 및 모델 발굴·확산
 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협력 및 정책 연계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16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중간지원기관 및 협의체

제18조(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

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지원

2. 사회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운영계획)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